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음 2월 6일) 제20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문 대통령, 지방분권국가 개헌 선언

靑, 개헌안 지방분권·총강·경제부분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집행기관 '지방행정부'로 변경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주민투표·소환 제도 헌법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 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개헌안에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0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공개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 취지 관련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 국가 선언'으로 규정됐다. 개정안 제1

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부분에서는 정책사업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조 수석은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류와 세율, 징수 방법 등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문 열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창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규모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21일 고창군 부안면 옛 북분자 시험장에서 준공식을 갖는 가운데 송하진도지사과 박우정 고창군수 등 참석자들이 입주한 귀농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거주시설 30호, 교육관2동 공동체실습장, 개인텃밭등을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창업에 대한 실습과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규모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21일 고창군 부안면 옛 북분자 시험장에서 준공식을 갖는 가운데 송하진도지사과 박우정 고창군수 등 참석자들이 입주한 귀농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거주시설 30호, 교육관2동 공동체실습장, 개인텃밭등을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개헌자문회의의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법원이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려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

MB 구속심사 일정 취소

법원 "방법·시기 내일 결정"

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종로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

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5시에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라며 "검찰이 덮어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반쯤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의 하나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뚱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비자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삼민 기자

농축협 종합업적 전북에서 8개 수상

익산원에·임실치즈 '최우수' 고산·무주·소양농협 전주김제완주축협 등 '우수'

전북농협은 2017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북의 8개 농·축협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익산원에농협(조합장 김봉학)과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이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에는 고산농협(조합장 곽동열),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임실축협(조합장 전상두),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찬수), 전북지리산나눔농협(조합장 이안기)이 각각 차지했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1131개의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난 한해 동안 농협의 경제사업과 보험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성장성과 경영관리, 농업인 실익사업을 평가지표로 한다.

종합업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낸 농·축협들은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농촌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 실익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농가소득 연 5000만원을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호 기자

매일 INDEX

2면 - 남북 정상회담 내용 제도화

4면 - 전주발전 이끌 대형사업 발굴

6면 - 상공인의 날 기업인 표창

16면 - 다스가 MB 소유인 이유?

종이의 유산을 찾아 "안네의 일기"편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

"Papier als ein Mensch Sie hängen besser dran."

- <안네의 일기> 중 안네 프랑크(1929-1945)



어두운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어린 소녀가 붙잡은 이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종이에 절박하게 남겼던 그녀의 바램이 이 세상에서는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유! 양심! 평화! ...

또한 우리 모두도 종이에 기록을 남기며,

종이 유산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만나며,

더 깊고, 더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